2017년도 한국경제학회 토론회

제 19대 대통령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14:00~17:40

장소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최 한국경제학회

후원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KEA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017년도 한국경제학회 토론회

제 19대 대통령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14:00~17:40

장소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최 한국경제학회

후원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KEA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초청의 말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인 5월 9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각 후보들이 공약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짜를 감안하면 한달 정도의 기간에 각 후보의 공약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근거로 투표를 해야되는 국민에서 주어진 시간은 이보다 더욱 짧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보다 냉철한 분석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실효적인 경제 정책과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절벽, 성장절벽 등의 국내 문제에 북한 리스크와 중국 사드 보복 등의 대외 변동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우리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경제학회는 각 후보별 경제 공약의 충실성, 실현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위해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제19대 대통령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토론의 장을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4월

한국경제학회 회장 구 정 모

프 로 그 램

14:00~14:30	**등 록**	진행: 이태석(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KDI)
14:30~14:40	**개 회 식** **개회사** 구정모 회장(한국경제학회, 강원대)	

• **사 회** : 김인준 명예교수(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서울대)

<토론회 참여자>

- 각 후보의 경제공약 담당 대표

홍종학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김종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이종훈 전 국회의원(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김정진 소장(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심상정 후보 측)

- 평가패널

김상봉(한성대), 김우철(서울시립대), 박상인(서울대), 성태윤(연세대),
이젬마(경희대), 임재영(고려대), 조준모(성균관대)

(가나다 순)

14:40~15:20	**주제별 토론 (Ⅰ) : 거시경제 부문 - 성장전략, 금융개혁**
15:20~16:00	**주제별 토론 (Ⅱ) : 재정 · 복지 부문 - 복지, 조세 · 재정**
16:00~16:30	**주제별 토론 (Ⅲ) : 노동 부문 -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16:30~16:40	Coffee Break
16:40~17:20	**주제별 토론 (Ⅳ) : 산업 부문 - 기업지배구조,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17:20~17:40	**종합토론**

목 차

경제정책 공약 평가 1

경제정책 부문별 주요 질의: 요약자료 25

경제정책 부문별 상세 질의: 전체 자료 35

경제정책 공약 평가

2017. 4. 27

경제정책 공약 평가

1. 거시경제 분야: 성장전략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 문재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한 경기대응과 경제성장 병행 추진 …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재원조달방법은 검토해야
○ 안철수: 제4차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교육·과학기술·창업 개혁 제시 … 단기 경기대응책은 구체적 논의 필요
○ 홍준표: 규제개혁을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환경 중심 … 현실적용을 위한 구체화 필요
○ 유승민: 혁신경제와 복지·노동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성장 … 경기부양책 추가 고려 가능
○ 심상정: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걸림돌 인식 … 민간부담을 최소화하는 설계 필요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이야기해도 실제 정책은 노동·복지제도 개선 제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거시적인 경기 회복과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며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평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가 타당성을 가져 증세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국민성장'은 경기회복에 필요한 정부지출을 일자리에 집중하되 이렇게 인력고용에 사용된 자금이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인적(人的)자본 투자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거시 경기대응과 장기 성장전략을 결합한다는 특성을 지녔다. 특히 고용확대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가 경기침체 탈피에 핵심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집권 직후 추진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제시하며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증가율 등 거시정책의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는 것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공공부문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민간 기업의지를 자극하는 전략은 충분하지 못하다. 조세를 통한 정부·공공인력 고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부가가치의 지속적 창출이 가능하게 민간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물론 경찰·소방·보건 등 공공부문 인력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그 자체를 일자리 창출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부담까지 있는 인건비 지출은 일회성 국책사업 자금을 절약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역시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이름으로 일자리와 결합된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을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적 특성을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과학기술·창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민간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된 부분 역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논의에 비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은 충분하지 못하다. 민간 활력을 회복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경기침체에서 빠져 나오고 경기침체의 구조화를 막기 위한 거시 경기부양 역시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못하다. 민간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대기업 80% 선까지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시 정부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격차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는 자금지원은 자칫 세금으로 기업 인건비를 보전하는데 그칠 수 있다.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공약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에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모두 못 한다'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이것 빼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내세우는데, 규제개혁 원칙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전면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거시 정책과 관련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증가시킬지 검토가 필요하다.

유승민 후보는 여러 정책을 경제성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시한다. 돌발노동제한, 초과근로시간 한도, 동시작업 금지, 관대한 고용보험 등 노동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제시하는데, 근로·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성장 동력의 확보와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경제 등도 혁신경제를 통한 생산성 확보를 추진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정책이 경제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일견 복지정책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 대응정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경기부양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도 추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양극화격차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 하에 복지와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간 공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이 장기 경제성장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증세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민간 부담은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도 인프라를 설계하는데 보다 초점이 놓여야 한다.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재원조달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증세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특히 경기침체 하에서 계획된 강력한 증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2. 거시경제 분야 : 가계부채와 금융개혁

김상봉(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총평

○ 문재인 후보 : 거시경제 성장 정책의 방향, 구체적인 재원조달, 실행가능성은 높아 보임. 그러나 가계부채에서 형평성이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금융은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홍준표 후보 : 거시경제 성장 정책의 방향은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방식을 알기 어려움. 가계부채와 금융분야 정책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음

○ 안철수 후보 : 과학기술에 기반한 거시경제 성장 정책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거시경제 성장 정책을 알기 어려움.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준비 중에 있음. 금융은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유승민 후보 : 창업과 중소기업에 기반한 거시경제 성장 정책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거시경제에 정책을 알기 어려움.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음. 금융은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심상정 후보 : 각종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체 거시경제 성장 정책을 알기 어려움.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음. 금융은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1.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거시경제 정책의 기조는 사람 중심의 투자를 위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에 대해 사람이 중심인 항목에 7% 증가율로 두 배 올리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 따라, 기존의 3.5% 증가율일 때 금액보다 연간 약 20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자연 세수증가분, 재정비효율 재정비,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국책은행 및 기금을 통한 보전분이며, 국민합의를 통한 증세가 가능하다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이후, 늘어나고 있는 세수증가분을 감안하면 현재 예측되는 조세부담률 18.3%~18.9%에서 10% 후반 정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으며, 2014년 OECD 평균인 25.1%보다 낮게 나타난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러 이유로 통화정책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인적자원과 관련된 분야에 정책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매우 구체적으로 재원마련 방안을 밝히고 있으며, 실행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자란 재원에 대해 실행방법이 없어 보인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7대 해법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이자율 상한제 도입,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죽은채권의 시효 연장이나 매각,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주택 안심전환대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이다.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은 적절해 보인다. 주택 안심전환대출 확대나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일부 따라가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

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은 참여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확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일부 내용도 도덕적 해이나 부채를 잘 갚고 있는 사람에게 잘 갚지 않아도 된다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전체적 방향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탕감 대책, 제도의 효과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외에 금융과 관련한 정책은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며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감독시스템 구축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이 금융시장의 주요 내용이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되어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어떻게 늘리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게 보여진다. 올해 미국 금리가 2~3차례 더 상승한다면 국내 금리도 일부 상승시켜야 자본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된다. 3% 후반대 성장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 3% 후반 성장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0% 고용률은 3월 현재 60.1%와 15세이상인구 4,366만명, 취업자 2,626만명임을 감안하면 취업자수가 약 430만명이 증가해야 한다. 고용률 70%는 5년 임기내에 인구가 감소하지만, 빠른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공약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2.5% 성장률 가정과 2016년말 원/달러 환율 1,157원을 가정하면 2020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세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매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예산 증가분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어렵다. 다만, 가계부채 및 금융과 관련한 정책은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이 있다. 여기에는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가 들어 있다. 즉,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구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역할, 재원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금융정책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공약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평가하기 어렵다.

3.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재정의 역할이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강연 등을

통해 공정성장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정정책에 관하여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감면제도 정비 후 순차적으로 증세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라는 공약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과학기술혁명,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이 성장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재원은 R&D 예산 조정과 민간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 맞는 성장과 공정성을 강조한 성장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이므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조정할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도 마련 준비 중이므로 평가하기 어렵다.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조직개편, 통합금융감독체계 마련, 재벌개혁-금융계열사 관리, 지배구조 감독시스템 도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성과연봉제 개선 등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입수가 어려워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되어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4.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는 성장방법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안전망 구축을 통해 혁신창업을 발표하였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강조하여 성장을 주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전체 거시경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거래와 연결되어 있다.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로 인하 유도하여 자영업의 경영안정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를 바꾸면 되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5.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거시경제 정책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증가, 소득세율 개편, 부동산보유세 변화, 상속공제한도 변경, 초과이익공유제, 세액공제, 즉, 재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재원조달 방법을 세분화한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7가지를 내놓고 있다. 이자관련 부분, 채무자대리인 적용 확대, 국민행복기금 감면률 확대,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경,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일부 단독조사 허용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제도의 변경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적용 확대는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으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채무자대리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 중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다. 또한,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을 설립한다. 전체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을 밝히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마련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알기 어렵다. 또한, 일부 제도 변경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3. 복지 분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공약은 복지공약이다. 복지는 보육, 교육, 건강, 노동, 노후, 빈곤,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루고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따라서 유권자의 표심을 끌기 위해 각 대선 캠프에서는 앞 다퉈 장밋빛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5당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집에 나열된 복지공약들을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이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일제히 들고 나왔다. 젊은 부모와 고령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심산이다. 추진 방안은 후보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두 정책만으로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복지의 중복수혜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하나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복지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겪게 될 갈등과 혼란이 4년 전보다 심각해질까 걱정이다. 각 당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을 꼼꼼하게 검증해야할 이유이다.

문, 복지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은 10대 대선공약 중에서 5순위로 등장하며, 그 공약은 크게 청년, 여성, 고령, 그리고 교육 분야로 나뉜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여성에게는 성차별 해소, 고령층에게는 노후를 보장하고,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과 육아의 국가책임제를 강조한다. 생애주기별로 복지수요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공약의 목표, 내용, 대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후보의 복지공약 키워드는 '국가책임'이다. 특히 획기적인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회활력을 찾겠다는 대담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예산의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질적 실현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굵직한 사회 이슈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아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성공여부는 재원조달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 분야 공약에만 매년 최소 7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후보 공약집에는 재정지출개혁,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책임에 교육과 육아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매년 7조원을 교실환경개선, 교사처우개선, 커리큘럼향상 등 교육의 질 개선에 사용한다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홍, 서민맞춤형 차등 복지

홍준표 후보의 복지공약은 10대 공약 중 3순위부터 5순위까지 등장한다. 홍 후보 복지정책의 슬로건은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인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홍후보는 10대 공약집에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명시하지 않았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지금보다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또 다른 공약과도 일치한다. 다른 후보들과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복지공약은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이 그 예이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이런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같은 취지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있었고,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격차해소와 기존 정책의 내실화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은 10대 공약 중 6순위로 등장한다. 안후보는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한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육아정책, 노후보장, 장애인 공약 등에서도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아동수당 도입 정도만이 눈에 띌 정도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효과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시도는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러나 10대 공약집에서 제시한 복지공약의 구체성이 낮은 것은 단점이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얼마나 인상할지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은 얼마나 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 비해 솔직하지 못한 것인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안후보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혁명을 2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문재인후보는 교육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공교육 회복을 강조했고, 홍준표 후보는 교육을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그에 반해 안후보는 학제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혁명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후보자들의 교육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유, 중복지 중부담

유승민 후보는 주요 복지공약을 1-3순위에 두고 있다. 공약의 순위만 놓고 본다면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유승민 후보 공약의 키워드는 '중복지 중부담'이다.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개선하겠으나 그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이 인지해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유후보 복지공약의 특징은 정책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현실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공약은 대표적인 예이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수요를 정확히 읽은 참신한 정책이다.

일부 공약에서는 정책 목표는 거창하지만, 제시된 공약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미흡한 측면이 발견된다. 3순위 공약의 목표로 빈곤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빈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지 의문이다.

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

심상정 후보의 복지공약은 노동, 여성문제 관련하여 4순위부터 처음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복지공약은 7순위로 제시되었다. 심후보의 복지공약의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이다. 생애주기 복지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훨씬 진보적이다.

심후보의 공약 중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고려해볼 정책들이 담겨 있다. 방문산후조리,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이 그런 사례들인데, 현실적인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심후보의 현실적 고민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그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질 공약을 담다보니 그 숫자는 많으나 구체성이 낮다.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라는 공약이 있는데, 어떤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심후보의 복지공약은 가장 진보적이지만, 임기 내 실천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의료제도를 폐지하고 병원비의 80%를 보장하려면,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할지 의문이다. 또 국민들이 이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복지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 증세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표심을 잃을까봐 복지확대를 위해 적잖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추고 있지만, 심후보는 솔직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 교육, 노후 등을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규모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낮아지고, 도덕적 해이, 노동의욕 상실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공약을 평가할 때에는 복지혜택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 캠프에서 각 공약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회장 선거의 공약과 다를 바가 없다.

각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한 점수를 매기자면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복지혜택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실천가능성과 재원조달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어떤 후보의 장점은 다른 후보의 단점이 되는 상황이다. 곧 실시될 대선에서 후보자의 어떤 장점을 지지할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당선 후에 발생할 단점을 떠 안아야하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후보자들은 이 점에 좀 더 솔직해 지길 바란다.

끝으로 각 후보들의 육아, 여성, 고령층에 대한 복지공약은 화려하나 안타깝게도 청소년을 위한 복지공약은 거의 없었다. 굳이 찾자면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개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약으로 청소년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요구할 만도 하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복지우선순위	★	★★	★	★★★	★★
공약의 구체성	★★	★★	★	★★½	★
복지혜택의 수준	★★½	★	★★	★★	★★★
실천가능성	★★	★★½	★★½	★★½	★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법의 구체성	★	★★	★½	★★	★½

4. 조세와 재정 분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우리들은 오랫동안 세금은 최우선적인 국민의 의무 중 하나라고 배웠다. 그러나 이는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공동체의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 합의를 거쳐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조세란 어쩔 수없이 무조건 짊어지게 되는 의무가 아니라, 공공재정의 운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권리인 것이다. '무엇을 위해 누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는 물론 전체 국민이 민주적 총의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선투표일을 목전에 둔 지금이 바로 조세와 재정 운용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국민이 투표를 통해 행사하는 기간이다. 향후 5년의 조세·재정 정책을 표로써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이 내건 조세와 재정 공약은 다른 어느 공약보다도 찬찬히 그리고 냉정히 살펴보고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조세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민주화 이전의 시대에서처럼 단순한 의무사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은 후보별로 150~280개의 공약들을 내놓았다. 개별 공약들의 개발에 후보들은 모두 분명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각 후보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전제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정책의 책임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운용 계획의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투명성과 실행의지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두 후보는 재정소요액 산출에서 비교적 소상히 그리고 정직하게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대규모 증세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실행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소요 산출의 투명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재원조달의 구체성과 실행의지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에 나타난 재정운용 계획은 이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산출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일고 있어 이를 말끔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사실상의 '증세 없는 복지'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원조달 계획을 신속히 보완하여 자신의 실행의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5명의 후보 모두에게 유보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 증세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규모 또는 소형 증세를 표방하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결국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재정지출 개혁 완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5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집에서 모두 복지와 고용창출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약속하면서, 이들 간의 전반적인 재정기조는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면에서, 진보적 성향의 심상정 후보는 연 기준 110조원의 재정투입을 약속한 반면, 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각각 연 42조원, 41조원과 36조원의 재정소요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재정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재정투입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실제로 이점은 대선후보 4차 토론회에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모두 문재인 후보의 재정소요 산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후보 측이 제시한 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투명성 시비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후보들의 재정운용 계획의 보다 극명한 차이는 재원조달 계획에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서 각각 72조원과 70조원의 대규모 증세를 구체화하였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24조원의 중규모 증세를,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6.3조의 소형 증세를 표방하였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심상정 후보가 70조원의 세수 증가를 임기 내 복지지출 등에 쓰는 것과 달리, 지출규모가 그보다 작은 유승민 후보는 72조원의 세수를 새로 설치한 기금에 적립하여 추후의 재정소요를 대비한다는 계획에서 차이를 보인다. 재원조달액 중 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유승민 후보의 복지확대 정책의 실천의지가 가장 높고, 심상정 후보 또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증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재원조달 계획은 동일한 진보진영에 속하는 심상정 후보로부터도 실행의지의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약집에 나타난 숫자대로라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사실상의 '증세 없는 복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소신 있는 선택과 상관없이 대규모 증세의 수용여부는 물론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그 결과에 따라 두 후보가 제시한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증세정책이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증세 청사진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70년대 말의 부가가치세 도입, 90년대 초의 토지초과이득세,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의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다. 이는 대선기간 동안 공약을 통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비용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될 만하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노선을 공약함으로써 '증세 없는 복지'를 실질적으로 대체한 공로가 인정된다. 중규모 증세를 표방한 안철수 후보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에 대한 절충주의적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소형 증세만으로도 중복지 수준의 재정투입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의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개혁 모두를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5. 노동 분야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 문재인 후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후보 외에도 거의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함. 상시 . 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및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원칙과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언급하고 있는 공약들은 직무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때 가능한데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가능하게끔 변경하는 과정을 규제하는 취업규칙 변경 등 법 조항에 대한 유연조정이 필요함.

- 원청기업에 사내하청에 대한 공동고용주 책임부여의 경우도 현재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간섭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법제도의 변화 없이는 언급하고 있는 조치들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중 일부는 수긍할 수 있으나(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방만경영, 재정부담(특히 향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급속히 증가 등), 그리고 현재 공공부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안은 채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조가 고용창출을 위한 임금삭감을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당장은 찬성한다 해도 현재 낮은 임금이 미래까지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노사민정대타협은 그 효과가 지속가능치 않으므로 지자체령 등 구속력 있는 제도를 통한 보장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특성 중 노동수요 대비 유연성 및 통합성이 가장 중요함.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제도가 국가주도형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예, 정부주도형(National) NCS 자격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도리어 정부주도형을 강화할까 우려됨.

- 각종 임금보조는 FTA, WTO에 임금덤핑 시비가 있을 수 있음. 국제협약, 규제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임금보조를 공약으로 담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자영업에 피해가 집중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적자체에 의한 특별연장제도,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하향조정과 같은 비용중립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액을 정해 수치로 공약으로 정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은 형해화되고 미래 한국경제상황에 따른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인상의 기조는 가져가되 구체적인 금액을 공약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임.

- 육아휴직 강화의 전반적 방향은 좋음. 다만, 중소영세기업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

으므로 국가지원 강화가 필요함.

- 안전과 관련된 위험직군 정규직화의 취지는 좋으나 안전관련 직무설계를 전제로 해야 함.

- 노동이사제와 노동회의소 공약은 지나치게 분배,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보임. 이 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업종별 협의기능 강화가 선결과제라 판단됨.

- 전반적으로 공공중시형, 분배중시형 일자리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성장촉진 및 시장활력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과 제안이 부족함.

◆안철수후보

- 직무형 정규직 도입 추진을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존재하는지 의문

-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특성 중 노동수요 대비 유연성 및 통합성이 가장 중요함.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제도가 국가주도형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예, 정부주도형(National) NCS 자격제도) 현재의 제도 개선 없이 4차 산업 분야 전문가 5년 간 10만 명 양성 등 수치 목표 달성자체가 무리가 있어 보임.

- 청년고용을 위한 코리안 실리콘 밸리와 같이 고용친화적 첨단산업 육성 공약은 중요하다고 봄.

- 각종 임금보조는 FTA, WTO에 임금덤핑 시비가 있을 수 있음. 국제협약, 규제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임금보조를 공약으로 담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국가임금직무혁신위를 설치하여 국가자격제도 정비, 직무전문능력 중심 평가 사회 구축 공약은 이전 정부의 NCS 등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소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보여 지난 정부의 관련제도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하여 개혁방안을 재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육아휴직 강화의 전반적 방향은 좋음. 다만, 중소영세기업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가지원 강화가 필요

- 최저임금액을 정해 수치로 공약으로 정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은 형해화되고 미래 한국경제상황에 따른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인상의 기조는 가져가되 구체적인 금액을 공약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임.

◆유승민후보

- 일자리정책과 노동보호정책(근로자의 일가정양립, 건강보호 등)이 혼재되어 있음. 육아휴직

확대, 칼퇴근법은 근로기준 강화, 일가정양립 촉진 정책으로 의미 있을 뿐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등은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규제로서 현장 일자리 실태를 감안한 공약인지 의구심이 듬.

- 동일노동의 범주 확대 해석, 차별 확인시 정규직으로 간주,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재의 차별 판단 기준과 절차, 국제제도 트랜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 유급(200만원) 육아휴직의 확대(3년)가 결과적으로 장기 휴직(아이가 셋인 경우 9년까지 연속 휴직 가능)사태를 가져와 기업의 여성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원청기업에 사내하청에 대한 공동고용주 책임부여의 경우도 현재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간섭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법제도의 변화 없이는 언급하고 있는 조치들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공정시장경제 공약도 상당히 구체적이나 규제 중심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중시 방향인 듯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규제가 집중적으로 포진하는 공약이 많아 단기간에 실시할 경우 일자리를 파괴하는 공약이 많음(네거티브식 규제전환 등 규제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공약들이 상호 모순됨).

◆심상정

- 전반적으로 공공중시형, 분배중시형 일자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본 방향은 문재인 후보와 유사하지만, 성장촉진 및 시장활력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과 제안이 부족함.

- 사회상속제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 부재

6. 산업분야 : 기업지배구조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 발전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했으며, 1986년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조항들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벌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은 20세기 초 미국의 진보적 운동에서 이미 인지된 바 있는데, 경제력 집중은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정치적·사회적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되어 버린 상황을 지칭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특정 재벌들의 정치·법조·관·언론·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심각한 수준임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한국의 재벌 총수는 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은 GDP의 106% 수준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과 일감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다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나열식·따라하기식 공약 제시로, 효과 면에서 중복되는 공약들도 다수 있다. 또한 재벌개혁과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혁신형 경제로 이행과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의 해소와 동반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나아가 공약실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일정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보 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을 차기 정부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1.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재벌개혁을 경제가 아닌 정치 분

야 공약으로 분류한 것이 먼저 눈에 띈다. 재벌문제를 반부패와 특권 및 특혜 철폐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으로, 계열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자사주 및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전자투표제 도입,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처벌 및 사면권 제한을 담고 있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방안으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확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및 계열사 간 출자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은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일정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캠프에서 언급했던 대로 4대 재벌에 대해서만 이런 개혁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반시장적 범죄자에 대한 기업 경영 배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10대 공약에는 빠졌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완료 목표 시점을 밝히지 않으므로 인해 실천의지에도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자사주 처분이나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더욱이, 경제력 집중 방지 방안으로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문제의 해소와 비지주회사체제의 재벌에 대한 금산분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주회사체제의 지정과 출자단계 규제의 개선에도 소극적이다.

2.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을 해소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방안과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대부분 동일하나, 비리경영인에 대한 이사자격 제한하고 임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총수일가나 이해관계자 거래를 주총에서 이들의 의결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다.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소유와 지배력 괴리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주회사 규제에서 지분율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사주 및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방안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지배구조라는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

니고 있는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공약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회계 투명성 강화도 강조하고 있으며, CEO 승계절차 공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CEO 승계절차 공시의 실효성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금지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며, 3배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징벌적 수준에 미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없이 소비자집단소송의 도입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화,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등을 공약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눈길을 끄는 공약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방지에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와 계열사 간에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불필요하게 강한) 규제의 도입이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의 사면·복권 금지,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창업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5.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뿐 아니라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도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의 개정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유일한 후보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지정제도와 출자단계에 대한 규제 개선,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배상의 한도 설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같은 핵심 내용이 다른

후보들처럼 누락된 점이 아쉽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방지도 지분율 요건 강화로만 충분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이나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7. 산업분야 :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젬마(경희대 국제학부)

경제·산업 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도록 산업·경제 생태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가적 대응 전략은 타 분야의 전략보다 복잡 미묘하다. 과거 1차~3차 산업혁명이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형 경제성장을 이룬데 반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제조 공장에 본격 적용되면서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수반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와 규제 체계 재정비는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입 자금규모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세밀한 전략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대기업·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마치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현재 이슈가 되는 모든 정책과제들이 구호성으로 열거되어 있어, 각 당 후보들 간의 공약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나열된 공약을 뒷받침하는 일관성 있는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각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과제로 어떠한 점을 부각시키고 타 후보로부터 차별화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의 지정 및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며, 공약을 이행할 컨트롤 타워가 확보되어야 한다. 선거 표를 의식한 나머지 모든 산업을 신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면, 신산업의 의미 자체가 희석된다. 또한 정권교체기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위적 조직개편 보다는 그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인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각 부처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모든 후보들이 국가 차원의 R&D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이미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다. 문제는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후보들의 공약에 이러한 R&D 사업화 촉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며, R&D 투자 컨트롤 타워 및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각 당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정책과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사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상당한 인프라 구축과 외형적인 확장이 진행되었다. 기존 정부의 정책 실효성 평가 및 기존 인프라 활용을 애써 도외시하는 공약은 정책의 연속성 부재 및 재정자금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창업 활성화 방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스타트업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화 전략 제시이다. 이는 자금 조달을 위

한 조세·금융 정책의 방향 및 정책금융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화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답변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세입확대이다. 탈루 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와 같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면 그나마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하지만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득이 될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혹은 재정지출 개혁이다. 이는 곧 다른 정책 분야의 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인데, 공약집 어디에도 늘어나는 예산만 있을 뿐 줄어드는 예산은 없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민간주도형 자금조달이다. 특정 후보는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및 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미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막연히 시장 원리만 외치는 것이 가당한지 묻고 싶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고위험 신산업에 자금이 몰리는 시장 원리가 잘 작동했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순위가 25위에 불과하겠는가? 더구나 시장원리를 외치는 특정 후보의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정부 주도 정책이며, 자금만 시장의 자금을 이용한다는 모순이 있다.

다섯째, 자본시장 활용 방안이다. 기술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는 출구시장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M&A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현 후보들의 공약에는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규제 이슈다. 신속한 융합신제품 출시를 가로막는 선행하는 규제 앞에서, 신기술이냐? 아니면 이 기술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성인가의 사이에서 규제 정책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후보들은 너도 나도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은 부재하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권자 대부분은 그들 현재의 삶이 4차 산업혁명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4차 산업 신 기술의 본질 보다는 그 기술과 그로 인해 야기될 생태계 변화가 내 삶과 가족, 그리고 후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선 주자들이 무조건 적으로 펼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육성 및 창업 공약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유다. 무분별한 장밋빛 공약 이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일자리 감소, 정보보안문제, 기존사업 사양화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공약이 수반되어야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경제정책 부문별 주요 질의: 요약자료

2017. 4. 27

경제정책 부문별 주요 질의: 요약자료

1. 거시경제 분야: 성장전략

작성자: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1.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정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2.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성향의 증가를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3. 재정정책으로는 조세에 대한 정책과 정부지출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요? 향후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요?

2. 거시경제 분야 : 가계부채와 금융개혁

작성자: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A. 가계부채 관련 질의

현재의 가계부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 및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4분기(940.7조원, 5.2%)→2013년 4분기(1,019조원, 5.7%)→2014년 4분기(1,085조원, 6.5%)→2015년 4분기(1,203조원, 10.9%)→2016년 4분기(1,344조원, 11.7%)

1. 전 정부는 경제성장을 부채를 늘리면서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부채주도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만약 가계부채에 변화를 준다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또한, 현재의 가계부채 흐름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후보께서 준비하는 가계부채 흐름의 변화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무엇인가요?

B. 금융개혁 관련 질의

2. 이전 정부의 금융개혁은 크게 10대 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의 많은 부분이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개혁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후보께서 제시하신 금융개혁의 방안은 다른 후보들이나 이전 정권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나요?

3.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매우 심하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대상자나 국민에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제시할 예정인가요?

3. 복지 분야

작성자: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1. 지난 10년 간 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구문제입니다. 무엇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 자살율 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조세와 재정 분야

작성자: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A. 재정정책 관련 질의

1. 재정지출 운용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복지확대나 투자확대, 고용확대, 신성장 지원, 산업구조개편, 중소기업지원,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등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 항목을 골라주어도 됩니다.

B. 조세정책 관련 질의

향후 복지확대나 고용증대 , 중소기업지원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등 세입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후보께서 제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의 큰 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조세부담률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가요? 또한 후보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지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후보께서는 증세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나요? 그렇다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증세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증세의 가장 주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5. 노동분야

작성자: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1. 한국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중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원하청 거래 시 공정거래 강화 방안과 근로자 간 격차 해소 방안은?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공약으로 그 금액을 정할 경우 인상 시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 수치이고 최저임금심의회에서 행하는 절차와 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정책은?

3.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복할증률의 조정 혹은 유예기간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시간단축을 연착륙하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6. 산업분야 : 기업지배구조

작성자: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1. 재벌의 부정적 영향을 교정하고자 하는 재벌개혁은 (1) 경제력 집중의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2)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 (3)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포괄합니다. 이 세 가지 개혁 과제 각각에 대한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며, 그런 공약들이 실천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시된 세 가지 과제 외에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 집권 후에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공약 실행을 책임질 조직과 실행 일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7. 산업분야 :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규제개혁

작성자: 이젬마(경희대 국제학부)

경제정책의 산업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산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동반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 하에서 토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기존 산업들이 신산업 탄생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후보께서는 4차 산업을 선도할 중점 신산업으로 어떠한 산업과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존 대기업들이 형성한 폐쇄적인 산업생태계를 바꿀 방안은 무엇입니까?

2. 후보께서 제시할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에 대한 정부 금융 및 세제 지원의 전체적 방향은? 특히 우리의 경우 엔젤투자자(개인투자자)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엔젤투자를 확대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그간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해 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엔젤투자/벤처투자, 한국 1.9%, 미국 49.2%, 영국 36.5%, EU 51.1%

3. 신기술 도입 시 선행하는 규제는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냐? 아니면 이 기술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성인가 사이에서 규제 정책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님의 규제 정책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정책 부문별 상세 질의: 전체 자료

2017. 4. 27

경제정책 부문별 상세 질의: 전체 자료

1. 거시경제 분야

작성자: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1.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의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2.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3.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정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4.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인 것처럼 실업문제데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산업에서도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용시장에서 단기적, 장기적인 측면의 어떠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하나요?

5.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성향의 증가를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6.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경제 환경 변화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기업 정책이 무엇이라 판단하는지요?

7.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대안이 존재하는지요?

8. 현재의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우리나라의 장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장기 경기침체 및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9. 재정정책으로는 조세에 대한 정책과 정부지출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요?

10.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여러 경제부문 중에서 어떤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11.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정책 제안은 무엇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정책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제안과 방안들이 금융감독 또는 재정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실행가능한 지요?

12. 향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요?

13. 조선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14. 미국이 금리 상승 기조를 취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데,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요?

15.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2. 거시경제 분야 : 가계부채와 금융개혁

작성자: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현재의 가계부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 및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4분기(940.7조원, 5.2%)→2013년 4분기(1,019조원, 5.7%)→2014년 4분기(1,085조원, 6.5%)→2015년 4분기(1,203조원, 10.9%)→2016년 4분기(1,344조원, 11.7%)

A. 가계부채 관련 질의

1. 후보께서는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율, 금리 변화에 대한 가계부채 규모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전 정부는 경제성장을 부채를 늘리면서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부채주도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만약 가계부채에 변화를 준다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또한, 현재의 가계부채 흐름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 후보께서 준비하는 가계부채 흐름의 변화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무엇인가요?

4. 가계부채 변화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에서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요?

5.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매우 자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이 다른 후보들이나 이전 대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6. 가계부채 변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세부 정책을 펼쳤을 경우, 정책의 효과는 국민경제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7. 가계부채 변화를 주게 되면, 여러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기타 다른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는 대상자와의 대화나 시장에서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8. 가계부채 변화를 위한 제도나 정책 변화에 따라, 후보께서 원하는 가계부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실현가능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9. 가계부채 변화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를 가지고 가실 것인 지 또는 어떠한 변화를 줄 예정인가요? 만약, 추진체계를 개편한다면 금융당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B. 금융개혁 관련 질의

이전 정부는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후보께서는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중장기적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큰 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이전 정부의 금융개혁은 크게 10대 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의 많은 부분이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개혁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3. 후보께서 제시하신 금융개혁의 방안은 다른 후보들이나 이전 정권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나요?

4.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매우 심하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대상자나 국민에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제시할 예정인가요?

5. 금융개혁 방안에 따른 실현가능성과 실현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후보께서 제시하는 금융개혁이 실현될 경우, 금융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요?

7. 금융개혁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8. 금융개혁에 있어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를 가지는 것이 옳은 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추진체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9. 금융감독 체계의 변화가 금융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3. 복지 분야

작성자: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1. 지난 10년 간 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구문제입니다. 무엇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 자살율 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안타깝게도 대선 공약 중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지가 어느 수준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이끌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4.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교육, 건강,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일 것입니다. 후보자는 한국의 계층 간 불평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와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국민들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은 유해질병의 위협과 우리사회의 대응 미숙함이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보자는 정부가 이 같은 환경과 질병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느 분야에 어느 규모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은 의료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도입 등은 이해집단 간 첨예한 대립과 각종 의료 규제에 막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7. 최근 몇 년 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반복되었고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효율적인 복지정책과 예산지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8.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증세없는 복지, 서울시 청년수당,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복지확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후보자는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한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복지 지출을 얼마나 늘여야하는지, 늘어나는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9.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0. 우리나라 복지 관련 문제들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대선 복지공약은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공약대로라면 재임 기간 동안 해당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재정 및 조세분야

작성자: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A. 재정정책 관련 질의

1. 후보께서 제시하는 중장기 재정운용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요?
2. 기존의 재정운용 방식이나 제도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3. 후보께서는 임기 내에 재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
4.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이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5. 재정지출 운용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복지확대나 투자확대, 고용확대, 신성장 지원, 산업구조개편, 중소기업지원,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등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 항목을 골라주어도 됩니다.
6.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7. 후보께서는 현재 재정제도 개혁이나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있다면,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8. 후보께서 제시하는 재정개혁과 세출구조조정 방안은 다른 후보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9. 후보께서 제시하는 재정개혁과 세출구조조정 방안이 임기 내에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또한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 제도적 ,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 재정개혁과 세출구조조정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주도 방식 , 위원회 주도 방식 , 대통령 직접 관장 , 국회 내 추진기구 설치 등에서 어떠한 방안을 선호하나요?
11. 후보께서 제시하는 재정개혁과 세출구조조정 방안의 파급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가하나요?
12. 종합적인 측면에서 후보의 재정개혁과 세출구조조정 방안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고, 전체 공약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하나요?

B. 조세정책 관련 질의

향후 복지확대나 고용증대 , 중소기업지원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등 세입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후보께서 제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의 큰 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조세부담률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가요?
2. 또한 후보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지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후보께서는 증세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나요?
4. 만일 증세 또는 세입확충이 필요하다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증세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5. 증세 또는 세입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과세를 강화해야 할 세목이나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6.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보께서 제시하는 조세정책은 어떤 점에서 크게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조세정책의 형평성, 효율성, 세수확보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7. 후보께서 제시하는 증세정책이나 핵심적인 조세정책 방안은 임기 내에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또한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제도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8. 증세정책이나 핵심적인 조세정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주도 방식, 위원회 주도 방식, 대통령 직접 관장, 국회 내 추진기구 설치 등에서 어떠한 방안을 선호하나요?
9. 후보께서 제시하는 증세정책이나 핵심적인 조세정책의 파급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가하나요?
10. 종합적인 측면에서 후보의 증세정책이나 핵심적인 조세정책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고 , 전체 공약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하나요?

아래 질문은 조세정책의 주요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앞의 질의들과 일부 중복이 있더라도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니 꼭 답해주기 바랍니다.

11. 임기 내에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 또한 인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떠한 종류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세부담 인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양도차익과세 강화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1주택보유자 양도차익 비과세나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14. 임기 중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인상폭은 어느 수준인가요? 인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15. 현재의 상속증여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가요? 강화할 계획이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요?
16.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무엇인가요?
17. 주류, 유류 (휘발유, 경유), 사치품목 (귀금속, 모피), 자동차 구입에 부과되는 현행 개별소비세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가요? 미세먼지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새로운 과세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나요?

5. 노동분야

작성자: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A. 후보자 공통질문

1.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주요정책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시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해 개혁해야할 규제 3가지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2. 한국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중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원하청 거래 시 공정거래 강화 방안과 근로자 간 격차 해소 방안은?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공약으로 그 금액을 정할 경우 인상 시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 수치이고 최저임금심의회에서 행하는 절차와 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정책은?

4. 노동관련 입법이 지난 정부 때 논의되었는데 관련 법안(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 출퇴근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생각과 수정 및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5.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복할증률의 조정 혹은 유예기간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시간단축을 연착륙하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6.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특성 중 노동수요 대비 유연성 및 통합성이 가장 중요함. 하지만 현재 NCS 자격제도는 정부주도형으로 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에는 경직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과 정책방향은?

B. 문재인후보 추가 질문

1.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나, 민간부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거의 보이지 아니함.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는?

2.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기계적인 수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려는?

3.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중 일부는 수긍할 수 있으나(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방만경영, 재정부담(특히 향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급속히 증가 등), 그리고 현재 공공부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안은 채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수를 늘리는데 대한 우려는?

4. 노동개혁5대입법 진통 중 3대입법(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 출퇴근산재)에는 동의했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입장은?

5.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6. 국가의 직접적인 임금보전 방법은 국가의 경쟁제한적 보조금지급(기업의 임금덤핑 방조) 혐의로 통상관계의 암초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C. 안철수후보 추가 질문

1. 민간부문 중심의 일자리창출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무엇인지?

2. 임금과 직무의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정부의 개혁과제 중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은 계승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있지만 근로시간 정책이나 임금 · 직무 혁신 및 직업훈련 과제는 이미 나온 정책은 새롭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3. 불공정하고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가 만든 임금테이블의 통일이라는 발상은 시장임금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의견은?

4.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일자리 확대를 예상하는지 구체적 목표와 디테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벤처 신화를 쓴 호보가 생각하는 벤처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5. 국가의 직접적인 임금보전 방법은 국가의 경쟁제한적 보조금지급(기업의 임금덤핑 방조) 혐의로 통상관계의 암초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D. 유승민후보 추가 질문

1. 일자리정책과 노동보호정책(근로자의 일가정양립, 건강보호 등)이 혼재되어 있음. 육아휴직 확대, 칼퇴근법은 근로기준 강화, 일가정양립 촉진 정책으로 의미 있을 뿐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2. 유급(200만원) 육아휴직의 확대(3년)가 결과적으로 장기 휴직(아이가 셋인 경우 9년까지 연속 휴직 가능)사태를 가져와 기업의 여성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3. 전체적으로 공약의 디테일이 제시되지만 노동시장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4. 공정시장경제 공약도 상당히 구체적이나 규제 중심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중시 방향인 듯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규제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공약이 많아 언급된 거시정책방향과 미시 공약의 충돌에 대한 의견은?

E. 심상정후보 추가 질문

1. 전반적으로 공공중시형, 분배중시형 일자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본 방향은 문재인 후보와 유사하지만, 성장촉진 및 시장활력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과 제안은?

2. 사회상속제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구체성인 의견은?

3.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여 격차를 해소하자는 연대임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며, 대기업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6. 산업분야 : 기업지배구조

작성자: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1.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정의되는 재벌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재벌체제가 한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2. 재벌의 부정적 영향을 교정하고자 하는 재벌개혁은 (1) 경제력 집중의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2)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 (3)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포괄합니다. 이 세 가지 개혁 과제 각각에 대한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며, 그런 공약들이 실천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3. 위의 2에서 제시된 세 가지 과제 외에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 재벌개혁과 중소기업·대기업 동반성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 위의 2와 3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이며, 행정입법이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6. 집권 후에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공약 실행을 책임질 조직과 실행 일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7. 재벌개혁이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8. 재벌개혁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거나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9. 재벌개혁 공약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0. 재벌개혁 관련 공약은 후보의 전체 공약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 산업분야 :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규제개혁

작성자: 이젬마(경희대 국제학부)

경제정책의 산업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산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동반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 하에서 토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후보께서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전체적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집중육성산업, 중소기업의 참여 및 역할, 이에 필요한 규제개혁의 방향에 따른 정부의 방향 및 역할을 중심으로)?

2. 현재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기존 산업들이 신산업 탄생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후보께서는 4차 산업을 선도할 중점 신산업으로 어떠한 산업과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존 대기업들이 형성한 폐쇄적인 산업생태계를 바꿀 방안은 무엇입니까?

3. 후보께서 제시할 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지원혁신 방안은 무엇입니까? 핵심 인력 양성과 연구비 투입의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R&D 투자비중은 거의 세계최고수준이나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습니까?(특히 정부 R&D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 R&D투자/GDP, 한국 4.29%, 이스라엘 4.1%, 일본 3.6%, 중국 2.05%
   * 정부R&D사업화 성공률, 한국 4.4%,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

4. 기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창업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외형적인 확장을 보여 왔으나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보께서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5.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정책금융의 핵심이었던 기술금융 인프라 확립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는 무엇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 및 설립된 인프라 활용

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특히 기술금융은 이전정부의 녹색금융 등과는 달리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TCB, TDB 등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향후 발전방향은?

6. 후보께서 제시할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에 대한 정부 금융 및 세제 지원의 전체적 방향은? 특히 우리의 경우 엔젤투자자(개인투자자)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엔젤투자를 확대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그간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해 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엔젤투자/벤처투자, 한국 1.9%, 미국 49.2%, 영국 36.5%, EU 51.1%

7.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지표 또한 나아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스타트업들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보께서 제시할 기술 스타트업 양성 방안은?

8. 기술스타트업 양성에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께서 제시할 정책금융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존의 정책금융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혹은 후퇴되어야 합니까? 정부예산을 통한 직접적 자금지원(중기청 등 정부부처)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는 정책금융간 지원 영역 면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 현재 우리의 기업구조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는 우선 모든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에 맞춰있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정부지원이 끊기는 일종의 “절벽현상”에도 기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검증이 없이 상장기준만을 낮춘 정책은 그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후보님이 제시하실 자본시장을 이용한 중소기업 출구전략 및 성장 사다리 전략은 무엇입니까?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M&A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및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역시 부자감세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제지원을 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10. 중소기업 및 신산업 양성을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벤처투자 및 펀드의 급속한 성장으로 VC 산업의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건데 국내의 경우 융자 및 보증에 바탕을 두고 있어 투자는 아직도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신산업 육성에는 투자 중심의 VC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VC 펀드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11. 투자 중심의 VC 확대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가 많지만, 현재 국내 VC들의 투자 관행 및 펀드 운용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위한 밴처기업 인증을 비롯한 평가 체계가 매우 후진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무늬만 벤처를 양산하고 있고 정부자금지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VC 투자의 질적 성장과 정부재정자금의 효율성 제고을 위한 후보님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벤처기업 지원이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 신기술 도입 시 선행하는 규제는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냐? 아니면 이 기술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성인가 사이에서 규제 정책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님의 규제 정책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13.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후적 규제, Negative 규제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 및 특별법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산업인 금융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핀테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지금까지 각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시적이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후보님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 성과 및 해결책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궁극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 후보님의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15. 지금까지 후보님이 응답하신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양성책, 규제 개혁에 있어 타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6. 지금까지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들이 당선 전과 후가 일치할 것이라고 보는가? 재원조달 방안 및 어려움은 없습니까?

17.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활성화 및 규제개혁을 선도할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정부조직개편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까? 중소벤처기업 전담부처를 설립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현재의 인력이나 전문성으로는 옥상옥으로 작용할 뿐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컨대 현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이나 주먹구구식 지원, 무늬만벤처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담부처를 설립할 경우 재정낭비만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18. 제시하신 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체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